

이슈 판



### 법원, 근로개선 요구하며 상복·장송곡 시위 버스기사 해고 '부당'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운전기사 사가 사측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호재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울산의 B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가 해고된 이후 5개월 동안 임금(매달 280만원가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A씨 복직 때까지 매달 310만원가량을 A씨에게 지급하

라고 선고했다. B사의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5월 회사에서 '대형버스 기사로 직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회사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B업체는 대형버스 기사로 재입사시키지 않은 채 일을 맡기지 않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

다고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와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되는 차별적 처우도 시정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B사는 3개월 뒤인 같은해 8월 A씨에게 대형버스 기사 복직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차별적 처우 개선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직과 함께 자연 각하된 구제 신청과 달리 A씨는 차별적 처우 개선 신청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B사 앞에서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틀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B업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과 근태 사항 등의 이유로 다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다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 중 상복을 입은 채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를 한 일과 근태 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매일 6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계약회사 클린룸 소독을 혼자 하다가 구역질 증세가 나 경비실 휴게실에 누워있으니 산재 타려고 그러다며 민폐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 ‘괜찮냐’는 말보다 ‘병원 왜 갔냐’는 큰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수술 후 복귀했는데, 과중한 업무와 휴가 제한으로 제대로 된 사후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암환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등 스트레스도 겪어야 했습니다. 회사에 부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오늘도 회사에 일하러 갔다가 신체적, 정신적 병을 얻어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산업재해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 간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248건 중 직장갑질119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어 치료 받았다는 제보는 9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이 중 신체적 질병은 31건, 정신적 질병은 67건이었다. 피해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질병을 얻었음에도 병가를

### 직장갑질119 “근로자들 산재피해 심각”

### 산재 신청 막거나 복직 후 괴롭힘 피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김용균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의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하다가 노동자들이 죽어도 현장 관리책임자만 처벌을 받을 뿐 그런 시스템을 만든 최고 경영자와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후정일 정도로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제공한 최고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게 된다면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김용균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의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하다가 노동자들이 죽어도 현장 관리책임자만 처벌을 받을 뿐 그런 시스템을 만든 최고 경영자와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후정일 정도로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제공한 최고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 9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모피는 발암물질과 동물학대 주범”

### 동물단체, 모피 퇴출 촉구

최근 아동용 겨울 점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동물학대가 수반되는 모피 제품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9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피는 발암물질과 동물학대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모자에는 너구리, 여우 등의 동물의 털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들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폼알데하이드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중저가의 모피 제품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모피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블루독, 베네통, 네파, 탐텐, 페리미츠의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의 천연모에서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쇼망스, 레노마, 머텔, 블랙아크, 신디키즈, 아이더, 켈리수는 기준 이하로 측정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이들은 “이번에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중저가의 모피 제품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모피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중저가의 모피 제품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모피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 ‘맘카페 분유사기’ 변호사도 당해... “최대 1000만원 피해자 300명”

### 김소연 변호사 “나 역시 25만원 송금” 피해사례 수집중

최근 육아 정보 커뮤니티 ‘맘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서 ‘분유 사기’ 피해가 속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전국 맘카페와 중고나라 등의 게시판 등에 따르면 최근 분유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김모씨는 맘카페와 중고나라 등에 자신을 ‘분유·기저귀 판매 대행업자’라고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납품해왔다. 김씨는 분유를 시중가에 비해 한 캔당 5000~6000원가량 싸게 판매했고 많이 살수록 할인 폭을 더 올렸다.

특히 주문자의 전화나 문자에 즉각 응답해 신뢰를 쌓는 한편, 배송이 늦어질 경우에는 분유 한 캔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부터 분유를 보내지 않은 채 주문자들의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김씨에게 분유값을 보내고 물건을

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300명, 피해 금액은 1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소울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사례들을 모으고 있다. 김 변호사는 뉴스과의 통화에서 “카페에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만에 30여명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 역시 25만원을 송금한 뒤 분유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이자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